



## 미 대법원, 건강보험개혁법 합헌 판결

김세중 선임연구원

■ 6월 28일 미 연방 대법원은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한 건강보험개혁법(Affordable Care Act)의 핵심조항인 개인의 건강보험 의무가입 조항을 합헌이라고 판결함.

- 건강보험개혁법은 2014년까지 개인의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며, 현재 건강보험 미가입자는 5,0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짐.
- 대법원은 개인의 건강보험 의무가입 조항이 의회의 권한을 벗어났다는 주장을 받아들지 않았으며, 존 로버트 대법원장은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개인에게 부과하는 벌금을 일종의 세금으로 볼 수 있고 이는 연방 정부의 권한에 해당한다고 설명함.
- 대법원은 빈곤층에 대한 보험가입 의무화에는 반대 입장을 표명하여,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보장제도인 메디케이드 가입자 1,600만 명을 제외한 건강보험 미가입자 3,200만 명이 2014년까지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됨.

■ 오바마 대통령의 대선 핵심공약이었던 건강보험개혁법은 오바마 대통령의 최종 서명 후에도 찬반 논란이 이어지면서 대법원 위헌 심판에 회부되었으며, 대법원의 판결 후에도 공화당 측은 건강보험개혁법에 반대 입장을 고수함.

-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 직후 건강보험제도 개선에 착수하고 건강보험개혁법안을 마련하였으나 공화당을 중심으로 한 보수층은 이에 크게 반발함.
- 건강보험개혁법은 상하원을 통과한 후 2010년 3월 24일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공식 발효되었으나 공화당 소속 주지사들을 중심으로 26개 주가 개인의 건강보험 의무가입 조항을 문제 삼아 법원에 위헌 소송을 제기함.
- 6월 27일 공화당 대선 후보 미트 롬니는 자신이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대법원 판결에 관계없이 건강보험개혁법을 폐기하고 새로운 개혁법안을 마련하겠다고 주장함.

(New York Times, 6/28 등)